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3
----------	------

발의연월일 : 2024. 7. 22.

발 의 자 : 이수진 · 박홍배 · 정동영
송옥주 · 김정호 · 민형배
한정애 · 송재봉 · 김 윤
민병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무인정보단말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사용을 통해 소비·거래 등 생활방식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이 같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음식점, 영화관 등 서비스업의 곳곳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사용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높은 불안감을 겪거나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노인들의 낮은 스마트 기기 활용률로 인해 다른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심화되고 있음. 노인들이 경험하는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노인 인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의3 신설 등).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3(편의제공의무)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 (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20093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절차·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편의제공의무)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

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 제20093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3 및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4조의3(편의제공의무) ① 재화</u> <u>· 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u> <u>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u> <u>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u> <u>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u> <u>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u> <u>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u> <u>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u> <u>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u> <u>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u> <u>의를 제공하여야 한다.</u></p> <p><u>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u> <u>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u> <u>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u> <u>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u> <u>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u> <u>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u> <u>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u> <u>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유·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u> <u>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u> <u>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u> <u>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u></p>

법률 제20093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3(편의제공의무) ① 재화

· 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093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고령친화도시"라 한다)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절차·취소,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4(편의제공의무 등)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